민생민주광주·전남회의와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광주지역 야4당은 지난 14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시민단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임시국회 법안 저지 및 용산참사 규탄 광주시민 결의대회'를 가졌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속도전'-'악법저지' 격돌하나

■ 여야 '쟁점법안' 처리 싸고 전운 고조

"주내 일괄상정" Vs "필리버스터"

그동안 잠재되었던 언론관계법 등 '쟁점법안'을 둘러싼 여야 격돌이 이번 주 재개될 전망이어서 2월 임시국회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여야의 격돌 소용돌이 속에서 F1 지원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등 지역 현안관련 법안들이 묻힐 가능성도 없지 않아 지역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여야는 이번 주 대정부 질문과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등을 마치고 지난 연말 연초 여의도를 뒤 흔들었던 쟁점법안의 공방, 이른바 '2차 입법전쟁'을 통해 사활을 건 재대결을 벌일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주 현인택 통일장관 내정자 등의 인사청문회에서 격돌한데 이어 이번주 통일외교(17일), 경제(19일), 교육사회(19일) 분야 대정부질문과 이달곤 행안부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19일)를 통해 입법전쟁 전초전을 벌인다.

일단 한나라당은 MB개혁의 성공을 위한 법안처리의 '속도전'을 주장하며 19일 이후 쟁점법안의 일괄상정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이 행안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는 대로 27개 핵심법안의 상정과 처리를 서두르기로 했다. 특히 2월 임시국회 회기가 내달 3일까지로 빠듯한 만큼 실력으로라도 쟁점법안을 강행처리한다는 전략까지 시야에 두고 여론의 추이를 점검하는 등 법안처리 최종 전략을 가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경제위기 극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금산분리 완화와 신문방송의 겸영을 허용하는 'MB 개혁법안'의 조속 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각에서 최대 쟁점법안인 언론관계법의 2월 상정은 어렵다는 기류가 있어 어떠한 결론을 도출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반면 야권은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여론전과 법안처리 심사 지연 작전 병행으로 맞설 태세다.

특히, 민주당은 용산 사고와 관련, 청와대 행정관이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이메일 '홍보지침'을 발송한 것은 "여론조작이자 국기문란"이라며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는 등 대대적 정치쟁점화를 시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상임위별로는 한나라당의 속도전에 맞서 법안 처리 시기를 대정부질문 이후로 지연시키고, 회의장 내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행위인 '필리버스터', 실력저지와 보이콧 등 다양한 저지전략으로 맞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또 24일까지 경제와 교육 등 7개 분야별로 이명박 정부 1년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어 'MB악법' 저지를 위한 여론몰이에 나선다.

이런 가운데 F1 지원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등 지역 현안법안들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여야의 정면충돌 국면에서 지역 현안법안들이 묻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마음은 벌써 4월 재보선에

재판 계류 지역구 많아 대상지역 늘 가능성

향후 정국 주도권 잡고 지역 여론 파악 잣대

오는 4월29일 치러질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의 대상 지역이 속속 확정되면서 선거분위기가 점점 무르익고 있다. 더욱이 진보세력의 연합공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15일 민주노동당이 이번 재보선에서의 진보진영 후보단일화를 공식 제안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현재 확정된 선거구는 인천 부평을, 경북 경주, 전주 완산, 전주 덕진 등 4곳. 하지만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6~7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오는 3월31일까지 재판에 계류중인 국회의원의 형이 확정되면 4월 재보궐 선거가 가능하다.

때문에 2심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5명 가운데 지난 1월 초까지 항소심 결과가 나온 한나라당 윤두환(울산 북구), 안형환(서울 금천) 의원 2명의 지역구는 재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 지난 2일 항소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한나라당 허범도(경남 양산) 의원의 경우도 판결시기가 빨라질 경우 재선거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다.

이처럼 선거구가 확대되면 서울, 인천 등 수도권과 함께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텃밭인 영·호남에서 동시에 선거가 진행되는 만큼 지역별 여론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수도권은 사실상 4월 재보선의 승패를 가를 요충지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더욱 의미가 큰 선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여야 모두 '거물급' 정치인의 출마 가능성이 있어 4월 재보선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에서는 '원외대표'라는 한계를 느낀 박희태 대표가 출마 결심을 사실상 굳힌 가운데 강재섭 전 대표, 지난해 대선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덕룡 대통령 국민통합특별보좌관의 출마 이야기도 새어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압승한 여세를 몰아 수도권에서 우위를 확실히 하겠다는 생각으로 지난 10일 이성헌 사무부총장을 단장으로 '4·29 재보선 승리 전략기획단'(가칭)을 꾸려 선거준비에 나섰고 3월 초까지 공천심사위원회를 구성, 출마자 선정에 착수한다.

민주당도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과 최근 민주당에 복당한 한광옥 전 새천년민주당 대표가 출마를 노리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수도권 민심 탈환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참신한 공천을 위해 공천심사위원회 출범을 3월 초로 늦췄다.

한편,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는 15일 민주노총울산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월 재보선 후보 단일화를 위해 진보진영이 원탁회의를 갖자"고 제안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메일 홍보지침'

靑 행정관 사의 표명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청와대 홍보지침'의 당사자인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소속 이모 행정관이 15일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는 15일 "이 행정관이 자신의 부적절한 행위로 물의를 빚은 데 책임을 지고 사직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면서 "이에 따라 적절한 행정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최근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폭로한 '청와대 홍보지침'과 관련, 자체 경위 조사를 벌였으며 앞서 지난 13일 "이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e-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이 행정관에게 구두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정치 보폭' 넓히는 정두언

MB 독대 이후 토론회 개최 등 발빠른 행보

이명박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불렸던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지난 6일 이 대통령과의 청와대 독대 이후 정치적 보폭을 넓히는 모습이다.

정 의원은 16일 정치 선진화를 위한 새로운 정당체제의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데 이어 17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자로 나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위기 대응 방식과 제언을 밝힐 예정이다.

'시대변화에 뒤처진 20세기형 정당체제 어떻게 바꿀 것인가'라는 제목의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당공천 ▲주요 정책에 대한 당론 여부 ▲원내 정당화 문제 등 민감한 주제들이 다뤄진다.

정 의원은 15일 "지금의 정당체제는 1963년 김종필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공화당을 창당할 때 만든 골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면서 "21세기형 정당 체제로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대응 미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알려졌다. 또 23일에는 당 국민소통위원장 자격으로 온·오프라인에서 시민, 네티즌들과의 직접 무릎을 맞대고 국정에 대해 토론하는 행사도 갖기로 했다. /연합뉴스